

http://www.motie.go.kr

보도참고자료



배포 즉시 보도하여	주시기	바랍니다
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

-11-1-1-1-1-1-1-1-1-1-1-1-1-1-1-1-1-			
배포일시	2019. 7. 24(수)	담당부서	세계무역기구과
담당과장	정경록 과장(044-203-5920)	담 당 자	차세운 사무관(044-203-5921)

"□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, 조속히 철회 필요" "일본측 외무성 경제국장과 1:1 대화 제안"

- WTO 일반이사회(7.23~24) 계기, □ 조치의 문제점 역설 -

- □ 정부는 7.23~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,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, 일측 대표단에 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:1 대화를 제안하였음
- ◇ WTO 일반이사회(General Council) 회의 개요
- ○일시/장소: `19.7.23(화)~24(수), WTO 회의실(스위스 제네바)
 - 일측 수출규제는 7.24일 12:40~15:30경 논의 (중식시간 2시간 포함)
- 우리측 참석자 :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(수석대표),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 ○일측 참석자 :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, 이하라 준이치 WTO대사 등
- □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,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*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음.
 - * "using trade as a political tool", "disrupting trade for political purposes"
- 아울러,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·공정무역을 강조하였던 일본이,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여 취한 것에 대해 항의함
 - * "a free and open economy is the foundation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" (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총리 발언)

- 일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**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**하고 있으나,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**전 세계의 산업생산** 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음
- o 상기 사유를 들며, 일측에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음
- □ 우리측은 일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을 지적하고,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,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측에 제안
- □ 일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,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 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음
 - * 일측 발언자 :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 (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미발언)
 - 아울러, 우리측의 **1대1 협의 제안**에는 별도의 응답을 회피함
- □ 우리측은 일측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**강한 실망감을 표명**하고, 일측이 **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**를 취한 점, 계속된 **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** 등을 **강하게 비판하였음**
- □ 한일 양국간 입장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, 제3국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으며, 이사회 의장(Kangvalkulkij 태국 WTO대사)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
- □ 금번 이사회 참석은 WTO **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***에서 **일측 조치의**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, 본 건에 대한 **일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** 부**가**시켰다는 의의가 있음
 - * 매2년 개최되는 각료회의 외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
 -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**지속적으로 제기** 하고,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차세운 사무관(☎044-203-59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